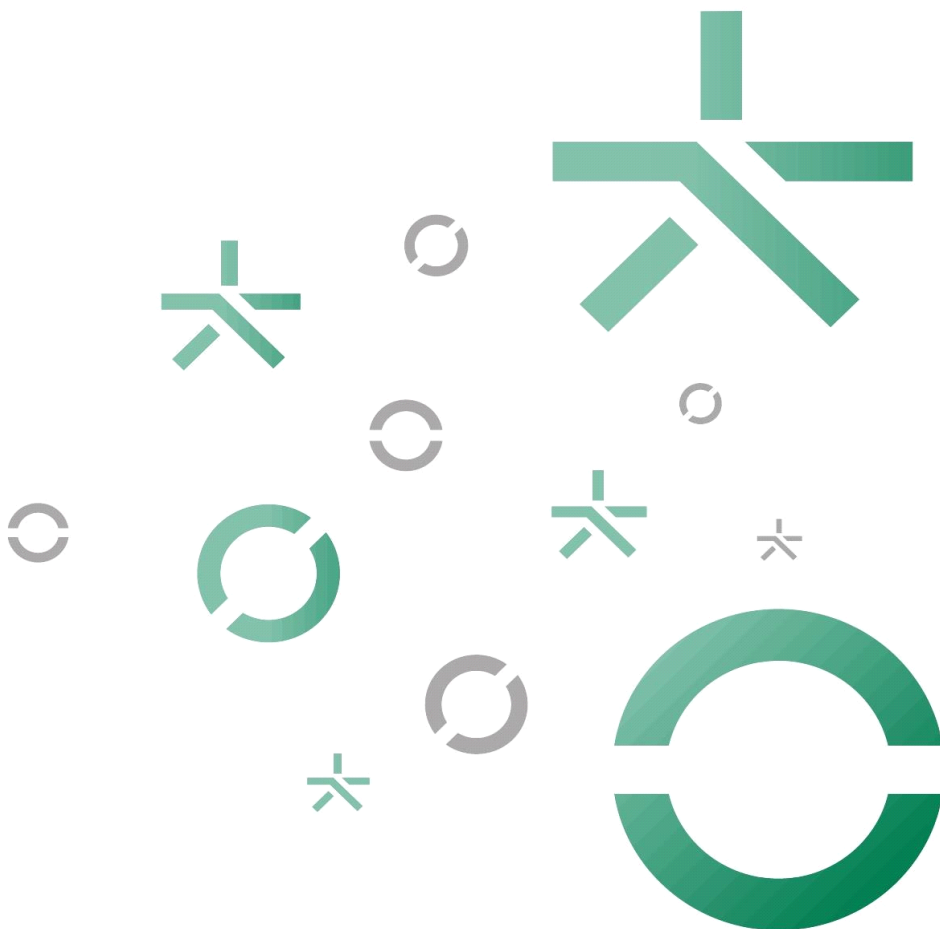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안전교육정책 개선방안 연구

연다혜·조성윤



## 연구책임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032-260-2679

csy0422@ii.re.kr

## 열람방법

인천광역시 행정자료실

인천연구원 자료실, 홈페이지([www.ii.re.kr](http://www.ii.re.kr))

이 보고서는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인천시 안전교육정책 점검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역맞춤형 안전교육정책 추진

### 수요자 중심으로 인천시 안전교육정책 개선 필요

인천시는 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정책의 방향성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교육 대상자의 현황 및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분야를 확대하고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교육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이후, 인천시 안전교육정책도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확대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기존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인천시 안전교육정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관련 법령 및 계획, 이행 실적 검토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안전교육의 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교육 참여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안전교육을 위한 자원과 시설이 부족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안전체험시설의 수도 부족한 상황이다.

새로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교육의 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대상과 분야의 범위를 확장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인천시 인구 및 위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정책 시행 방안 모색

지역 맞춤형 안전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구 및 위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정책은 교육대상이 주로 어린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일반 주민이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또한 교육 분야가 주로 보건에 집중되어 있어 6개 안전 분야를 균일하게 시행하되 인천시의 위험 특성을 반영하여 보강할 필요가 있다.

## 향후 수요자 중심 안전교육정책 전환을 위한 과제 제안

인천시는 사각지대 없는 안전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① 수요자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 확립
- ②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안전체험관의 범위 확대
- ③ 온라인 안전교육 커리큘럼 개발
- ④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⑤ 시민 참여형 평가체계 도입

**주제어** #안전교육 #안전교육정책 #재난교육 #재난대비 #안전문화